

데스크 시국



송기동 문화2부장 겸 편집부국장

“... 그러고 나자 그(주인)는 자백을 한 다른 사람 전부와 똑같이 운동장 저쪽에 있는 호(壕)속에 처넣어 놓고 그곳에서 총살되었다. 이름도 죄명도, 누가 심문하고 누가 사형을 집행했는지도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소멸되었다.” 미국 ‘라이프’(LIFE)지(誌) 특파원 칼 마이던스(1907~2004)가 기록한 민간인들의 즉결 처형 모습이다. 그는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0월 26일, 순천 농림학교에서 진압군들에게 처형당하는 주민들을 목격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여순사건특별법’ 20년 만에 통과

진압군과 경찰들은 모든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모이도록 했다. 그리고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많은 주민들을 심하게 구타하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총살했다. 우익 세력들이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지목당한 사람을 저승길로 보내는 ‘손가락 총’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2019년에 (사)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편역해 펴낸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에는 그가 여수와 순천에서 목격한 참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1949년 전남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여순사건 희생자 수는 1만1131명에 달했다.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입지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미리 이름을 알리기 위해 명칭 때면 현수막을 내걸고 화려한 경력이 적힌 명함을 돌리며 지역을 누비는 출마 예정자들을 자주 본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예로부터 인물을 고를 때에는 네 가지 기준이 있었다. 선거와는 다르지만 관리를 선발할 때의 기준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이 그것이다. 중국 신당서(新唐書), 선거지(選舉之)에 나오는 탁인기준(擇人基準)으로 ‘신(身)은 용모가 위풍이 있어야 하고(體貌豐偉), 언(言)은 언사가 분명하고 바르며(言辭辯正), 서(書)는 글씨가 힘차고 아름다워야 하고(楷法遒美), 판(判)은 문리가 뛰어난아함(文理優長)’을 말한다. 선거에서도 후보자를 뽑을 때 신언서판 중 신언(身言) 즉 용모와 말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깊은 정보가 없을 때 겉모습인 신언이 선택을 좌우

기고



강순후 광주시선관위 상임위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전 대선과는 달리 후보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다중소셜미디어 SNS·유튜브·메타버스 등 비대면 방식의 선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약간의 수고만으로도 후보자와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부족, 젠더 및 세대 간 이슈, 기본 소득 논쟁, 인구 절벽과 기후 변화 등 급격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경쟁은 없고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하는 감정이 선거라는 보도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후보자 비호감도가 높아 짝을 사람을 결정하지 못한 선거인의 비율도 매우 높다고 한다. 일반적인 후보자의 선택 기준은 인물, 능력, 정책, 소속 정당, 정치 이념, 도덕성과 연구 등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신

통한의 74년, 해원(解冤)은 아직 멀다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0년 16대 국회부터 2016년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 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한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곤 했다. 그리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을 중심으로 다시 발의돼,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73년이 흐른 후의 일이다. 여순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제주 4·3 사건의 경우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과 비교된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출범하고, 전남도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발족했다. 앞으로 1년 동안 희생자 유족들의 신고를 접수받은 후 2년간 진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여순사건은 ‘반란(反亂)’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두 달여 만에 발생한 여순사건을 국군 제14연대의 반란으로 규정, 연좌제 실시와 보도연맹 창설, 숙군(肅軍) 사업, 학도호국단 창설, 국가보안법 통과 등 강고한 우익 반공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반란’이라는 오욕과 고통 속에서 저마다 속으로 파울음을 삼켜야 했으며, 피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디서든 ‘함부로 나서지 마라!’는 말을 해야만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도올 김용옥은 지난 2019년 출간한 ‘우리 너무 몰랐다’를 통해 “여순반란이 ‘반란’이

되려면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내려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여수 14연대의 항거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일 뿐이며, 사회사적·정치사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가벼운 ‘소요(騷擾)’에 지나지 않았다. 얼마든지 정상적 궤도로 꺾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소요였다. 이것을 대규모 국민학살극으로 확대시킨 것은 오로지 국가 폭력의 업이었다.” 유가족의 한 담긴 위령비 ‘말줄임표’ 우리는 이제서야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째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인이 됐거나 80~90대 고령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인근에는 ‘만성리 형제묘’가 자리하고 있다. 나지막한 봉분 앞에 ‘형제묘’와 ‘원혼비(冤魂碑)’라 쓰인 비가 서 있다. 1949년 1월 13일, 당시 헌병들은 여수 중산국민학교에 부역 혐의로 수용됐던 주민 가운데 125명을 이곳에서 총살한 후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한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할 수 없어 커다란 봉분을 만들고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는 의미에서 ‘형제묘’라고 이름 붙였다. ‘형제묘’ 근처에 서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의 뒷면엔 아무 말도 새겨져 있지 않다. 다만 말줄임표가 있을 뿐이다. 이른바 백비(白碑)다. 이곳에 희생자 유가족들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는 ‘해원(解冤)’의 메시지가 새겨질 날은 언제일 것인가?

신언서판(身言書判)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겉모습만 보고 투표할 경우 국가는 물론 지역의 미래를 망칠 수가 있다. 국가 원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닌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자이자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언 뿐만 아니라 전체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선명 기준으로 삼을 때 더 좋은 인물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신(身)은 겉모습인 용모보다 후보자의 신상(身上)에 관한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후보자의 경력, 인품, 전문성, 업무 추진 능력 등을 따져 더 나은 사람을 골라야 할 것이다. 과거 이력이나 비위 여부는 물론 행정이 배운망덕하거나 위선자는 아닌지도 두루 봐야 한다. 둘째, 언(言)은 정치의 도구이다. 연설과 토론, 대담 등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을 파악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일리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토론 등을 통해 공약의 이행 가능성, 실천력 등을 살펴보고 비현실적 공약을 제시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막말, 저급한 언행이 습관화된 후보자는 걸러야 한다. 셋째, 서(書)는 글씨지만 요즘은 컴퓨터 활용 능력과 문장력이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가르쳐 준 전자 결재나 겨우 할 줄 아는 컴맹의 단계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IT 활용 능력을 갖추었는지 중요하다. 평소 후보자들이 기고한 신문 칼럼이나 그들이

보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살펴보자. 그 사람의 지식 정도, 인성, 문장력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판(判)은 판단력으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의사결정의 요체이다. 인사·예산·사업 등이 모두 단체장의 판단력에 의해 결정된다.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도 판단의 영역이다. 후보자의 판단력은 평소의 행동을 보면 드러난다. 스스로 결정을 못 하고 좌고우면하는 자,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이중잣대로 재단하는 자, 일시적 감정으로 중대사를 흐르치는 자, 비교학적 방법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라면 선택을 재고해야 한다. 이제 대선은 불과 40여 일, 지방선거는 4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에서 재해석한 신언서판의 내용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후보자가 출마에 앞서 새겨야 할 자기 검증의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에서 흠집 없는 인물이 어디 있을까만 그중에서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능력 있고 준비된 후보자들이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 경쟁으로.

어떤 후보자를 뽑을 것인가

의 저서 ‘소멸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지목했다. 정치인은 열정만 있고 책임이 없어서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과 신념만 고집해서는 안 되며 주어진 환경, 반대 의견 등 현실 여건도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명 의식은 내면적 신념 윤리와 현실에서 실천해야 하는 책임 윤리가 공존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정치인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라는 이질성을 통합할 수 있는 매우 절제된 균형 감각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명 의식은 왜 정치를 하려 하는지는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방법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국가의 거대 담론에 서부터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기간이 되면 후보자의 인물 정보와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력, 경력, 전과, 재산 신고액, 병역 이행 여부, 납세 실적과 체납 여부 등 후보자의 인물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에서는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선거 공약 등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社說

각계 반대 ‘문화전당재단 인사’ 당장 철회하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장 및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지역 문화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광주시까지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착화시민연대,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와 문화예술단체는 잇그제 5·18민주광장에서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각계가 이번 인사 파행에 대해 항의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과 사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문체부의 이번 인사는 장관에 명시된 기본적 인 절차도 무시한 데다 지역과의 소통 부재 등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구)도 성명서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는

1천억 공사에 안전 비용은 고작 1억이었다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을 위해 책정된 안전관리비가 1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 39층 316세대 규모의 아파트 네 개 동 총공사비의 1천분의 1 정도이니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공개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안전관리비로 1억 6597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2단지 공사비가 1236억 642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0.13%를 안전에 투자한 셈이다. 안전관리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사 현장 안전점검 9520만 원, 계층 장바나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3160만 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1760만 원 등이었다. 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1600만 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455만 원,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100만 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 같은 금액은 공사 금액 4000만 원 이상인 현장은 일정 비율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정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이다. 다른 건설 현장 역시 비슷한 실정이라는 얘기인데, 그나마 쓰임새마저 제한적이다.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 설치나 건설 현장 차량 유도원 고용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하거나 진흙입로 차량 유도원 고용에는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다. 현행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투자 규정은 건설업계와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준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다. 빈발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소 사전에 제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discussing labor safety and government policies. The article highlights the lack of safety measures in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and calls for improved regulations and funding. It mentions that safety costs are a tiny fraction of total project costs and criticizes the current system for not prioritizing worker safety.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Korean title: '光州日報'. Includes publication details like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